

≡ 警友칼럼 ≡

60년 上命下服 이제는 개선할 때 참여정부는 대국민 약속 지켜야

—— 이 규 식 회원(前 해양경찰청장)



1. 60년 묵은 한국의 수사구조

우리 나라 수사권 구조는 일제식민지 시대의 구형 사소송법

수사체계를 그대로 계수하였다. 그동안 민주화된 수사구조로의 개혁 시도가 몇 차례 있었으나 모두 무산되었다.

우리 검찰은 기소권의주의를 바탕으로 한 수사권과 소추권을 독점하고 있음과 동시에 많은 자체수사인력을 보유한 거대권력기구로 보장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대한민국에 없다. 현행법상 경찰은 범죄수사시 사사건건 검사의 지휘·지시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검사의 종속기관으로 전락하였다.

그동안 경찰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여러번 시도하였으나 검찰은 그때마다 자질, 인권침해, 부패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번번히 좌절시켰고 역대 정권 또한 선거공약 수준 이상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국민들 역시 똑똑한 검사가 더 잘 할 테지 하는 막연한 고정관념으로 검·경간 수사권문제를 양 기관의 밋고트 싸움쯤으로 치부해 왔다.

이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정기구인 수사권조정자문회의가 국가이익과 국민편익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조정안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믿으며, 이 조

장급인 경무관까지 검사지휘 대상이라는 점, 경찰조사 후 검찰의 2중조사로 인한 국민불편, 구속영장신청 등 각종 수사서류지위로 인한 인력·시간 소모, 경찰인지 사건의 중지·이첩 명령 후 검찰의 생색내기식 수사, 관찰 밖 수사시 검사에 대한 보고의무, 경찰서장 관리책임인 유치장 감찰, 수사경찰관 체임·징계요구권, 변사체 검사지휘 지연으로 인한 장례과정에서의 국민불편, 미결수 호송 감시·대용감방 관리책임 지우기, 집단시위 및 정당·사회단체 동향 등 각종 정보보고의무 등 개선이 필요한 제도와 법규를 일일이 헤아리기 곤란할 지경이며,아울러 세계 어느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헌법상 「영장청구권의 검사독점」(제12조 3항)은 1962년 5차 헌법 개정시 공문화도 거치지 않고 신설된 것으로,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성안·의결되는 등 비정상적인 헌정상태에서 국회에 의한 개헌 절차를 밟지 못한 채 공포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차기 개헌시 반드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권한은 검찰에, 책임은 경찰에만 지우는 일방적·비민주적 독소조항들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다.

4. 수사권 조정의 당위성

민주분권적 수사구조로의 전환은 경찰이나 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다. 수사권이 한 곳에 집중되면 반드시 권력남용과 부패를 초래하므로, 합당한 합의 분산이 필요하다.

연 200만명 이상의 국민이 경찰사에서 조사 받고 또 검찰에서 2중 조사를

받는데서 오는 불편과 정신적 부담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경찰의 경찰화로 인한 막대한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 10여년전보다 검사는 400명에서 1,500명, 수사요원은 400에서 4,600명으로 늘어났음에도 연간 1인당 사건수가 업무량은 2,200여건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여 검찰은 공소유지와 양질의 수사지휘, 대형사건 수사에 전념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부여, 견제와 균형, 부처간의 상호존중은 현대 민주주의 행정의 기본원리이다.

5. 조정 방향

일방적 상명하복의 검경관계를 상호 협력관계로 개선하여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충실케 하여야 하며, 검찰은 정치적 사건, 권력비리, 고도의 난해한 사건수사와 공소업무에 전념케 하여야 한다.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인정하되 기소 단계에서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행사하고, 검경간 수사와 공소유지를 위해 언제든지 격의 없는 자문과 협의가 가능한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간다면 제도상의 문제점들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원래 권력을 가진자는 농기를 싫어한다. 검찰의 자발적인 양보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다.

그러나 해방 후 6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검찰과 경찰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편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사권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현재 사회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검·경 수사권 조정자문회의는 진정한 국민 편익을 고려한 수사권조정을 위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화와 개혁의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참여정부는 검경간의 수사권을 국민편익증진을 우선으로한 선진국형으로 개혁하여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성공적인 금자탑을 세우길 바란다.

≡ 名士칼럼 ≡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침탈하려는 일본의 망동앞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그간 분열과 대립으로 얼룩졌던 우리 사회가 모처럼만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조용한 외교를 포기한 한국정부는 강경한 신대일독트린을 발표했고, 노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외교전쟁까지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방자한 일본에 대해 역대 한국정부가 꼭 참고 국력 회피해왔던 하고싶은 말을 기어이 하고야 마는 참여정부의 색깔은 확실히 선명하다.

그 단호함은 일본의 생애에 지친 국민들에게 숙이 후련하다는 느낌을 준다.

시네마천 고시 이후 연 이은 대일 강성 발언과 함께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독도문제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지 그 밑바탕에 일본 우익의 총체적 국가재편

프로젝트가 자리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동북아의 패권을 염두에 둔 일본의 공세적 국가전략의 일단인 것이다.

따라서 점증하는 일본의 패권주의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노대통령이 직접 직격탄을 날린 것에는 일정한 의미가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사활을 건 국제외교전이 말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다. 국가간의 관계에서 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행동이며 정책이고 국력이다.

이 점 한일간의 독도영유권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질적 전환점은 단연 1999년 1월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인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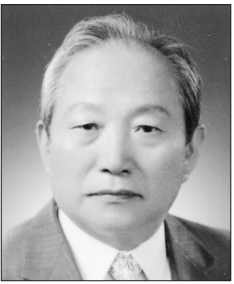
요새 뜨거운 논란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이 협정이 독도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때문이다.

즉 독도를 포함한 그 인근의 수역이 중간수역(한국의 표현), 또는 공동관리수역(일본의 표현)으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어떤 표현이 됐건 문제의 핵심은 한국정부가, 독도와 그 영해(12해리)가 한국 영토임을 표시하지 않은 쌍무협정에 이해당사국으로서 동의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조약을 제

나라를 불모로 핵을 휘두르지 말아야

—— 김 성 략 회원 (참전경찰유공자회 이사)



인생 70여 성상을 살아오며 8.15 조국광복 이후 좌우의 극심한 대립과 6.25 공산 침략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온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는 희망과 덕담에 앞서 꼭 한 마디 외치고 싶은 한(恨)이 남아 있다.

“지주” “혁명” “개혁”을 내세우며 온 나라를 분열과 지역세대 계층간 갈등과 투쟁 속으로 몰아넣은 일부 386정치인들, “경제성장”과 “국가안보”를 방패로 과거의 비리를 가리며 타협과 설득의 민주원칙을 내던지고 패거리싸움에 만신창이 돼버린 “골통” “보수” 정치인들 당신들은 역사에서 금쪽같은 2년이라는 긴세월을 허송하며 누구를 위해 그토록 처절한 싸움판을 벌여왔는가? 그리고 얻은 것이 무엇인가?

여,야 지도층이 우리에게 보여준 “파당정쟁(派黨政爭)”과 “졸속붕합정치(拙速糞合政治)”는 실망과 허탈을 안겨주는 데 끝나고 말았다. 그렇다고 우리의 미래가 절망적이라는 것은 아니다.

새해들어 노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에서 보인 “경제우선”, “서민생활안정”,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의 다짐은 온국민의 박수를 받을만 하였다.

그리고 첫 국무회의에서 밝힌 “우리 스스로를 너무 어렵게 보고 부정적으로 평가” 해온 “역사 인식상의 이점”도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해 나갈 뜻을 제시하여 이제 유류난 새해에는 여,야는 물론 국민 모두가 경직된 마음을 풀고 하나로 뭉쳐 대한민국의 찬란한 대국기가 선진국 대열 속에 휘날리게 되기를 충심으로 축복하고 싶은 것이다. 새해를 맞이하여 가장 중요하게 마음을 다져야 할 일은 나라의 안보문제이다.

그간 우리정부는 대외적으로는 동맹국과 불편한 관계까지 이르면서 대내에서는 “친북용공정부”라는 비난을 받으며 대북지원과 저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려는 배려를 합겹게 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우리정부의 동족애적인 이해와 노력을 강그리 무시하고 지난 2월 10일 소

위 외무성명명을 통해 “핵무기의 보유”와 “6자회담의 무기한 중지”를 선언함으로써 우리정부를 난처하게 하며 6자회담 당사국간의 첨예한 외교적 군사적 긴장상태를 조성케 하고 있다.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애써 희석시키면서 지속적인 한,미 협조를 다짐하며 “북핵보유 불가”와 “6자회담의 조속한 복귀” 원칙을 촉구하고 나섰으나 북한은 6자회담보다는 먼저 북,미간의 양자타결을 희망하며 보다 유리한 협상이익을 확보하려고 버릴것 외교모험을 하여 사실상 한반도는 김정일군벌의 “핵난동(核亂動)”으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그간 북한전문가들은 중국의 영향하에 있는 북한이 “핵 보유를 자기들의 체제유지수단”으로 인식하는 이상 김정일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와 그렇다고 김정일이 “핵생산과 보유를 끝까지 고집하여 평양을 잿더미로 만드는 불장난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분석으로 집약되어 있었다.

그런 가운데 이번 북한의 도발적 행태는 “핵생산과 보유”를 공식으로 선언하여 “6자회담을 무력화”하고 반만년의 역사와 같이 5천만의 단일민족이 평화롭게 살아가야 할 이 나라를 불모로 “핵”을 휘두르며 도전과 협박으로 “김정일 세습왕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다.

김정일의 눈에 비친 미국은 세계가 반대하는 “이라크에 대한 전쟁과 민주정부 수립정책”을 함겹게 끌고가는 “종이호랑이”로 보이고 남한은 좌파들이 좌지우지하는 “친북세력들의 편”으로 미국보다는 중국의 눈치를 먼저 의식하는 저들의 공조세력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사실상 이와같은 저들의 망상책임은 그간 “6자회담에 연연”하면서 저들에게 시간을 벌여준 한,미 양국의 우유부단(優柔不斷)한 대북정책(對北政策)에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단호하게 이러한 김정일의 도발적 망동을 견제하는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여 미,일과의 외교적 군사적 동맹관계를 더욱 굳게 강화하고 중,러 등 다자간 협력도 새로운 각도에서 전략을 세워 국가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다져나가야 한다.

독도문제와 한국정부

—— 윤 평 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

결한 DJ정부도 그랬지만 현재 참여정부도 이 협정은 어업에 관한 것이지 독도 영유권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논가리고 아웅하는 공책한 논리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영토야말로 어업권과 연계된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基點 노릇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한국 정부가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를 한국EEZ의 기점으로 삼음으로써 국제법상 독도와 그 인근 수역에 대한, 주권국가로서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스스로 훼손하고 만 데 있다.

우리 국민이 확신하고 있고 역대 한국정부가 주장한 것처럼 독도가 정말 우리 땅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신어업협정체결시 이런 치명적 독소조항을 우려한 일부 시민단체와 학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한국정부의 봉합책과 일반 국민들의 무관심 때문에 국가적 의제가 되지 못한채 묻혀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강경한 대일독트린으로 일본비판의 선봉에 선 국가안보상임위원회(NSC)의 현

책임자인 정동영장관이 1999년 당시 집권여당의 대변인으로서 어업협정의 정당성을 강변했다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노대통령도 조약체결 1년여 후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는데,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나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제법상 일본으로 하여금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있는 문제의 어업협정을 대체할 정책대안을 참여정부는 차분하게 준비해 두고 있는가?

독도문제에 대해 단계적 전략을 구사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무력분쟁까지를 겨냥하고 있는 일본에 대처하는 장기적 비전을 한국정부가 마련해두고 있는가?

현재 독도 경비를 위해 경찰이 수고하고 있는데, 이처럼 국가의 안녕이나 국토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공허하고 감성적인 말대신 냉정한 정책적 계산을 앞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현재 독도 경비를 위해 경찰이 수고하고 있는데, 이처럼 국가의 안녕이나 국토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공허하고 감성적인 말대신 냉정한 정책적 계산을 앞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장관님!

—— 손 기 태 회원 (일산경우회 부회장)



회의 외교통상 분야에서 국익을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말단공무원으로 근 40여년 가까이 근무, 정년 퇴임하여 현재 70의 고희(古稀)를 눈앞에 둔 필부(匹夫)로 저를 소개 올립니다.

엊그제 10여명의 전직 동료들과의 정기모임에서 외람하게도 장관님을 비분강개하게 성토하는 말들이 오고 갔기에, 때 늦은 감 있지만 그 내용의 요지를 일차 쏘필(拙筆)로 드리오니 혹시 언짢으신 내용이 있으시더라도 관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8일 경찰청장이 설을 맞아 고향을 찾지 못하는 독도군무 경찰관들을 위로하기 위해 독도를 한 번 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장관님은 “경찰총수가 독도를 순시한다면 일본측도 순시함을 보내는 등 대응 조치를 취해 또 다른 분쟁을 낳을 수 있다”,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제동을 거셨던 사실에 대한 재논란이었습니니다.

경찰총수가 천애(天涯)의 독도 경비 근무에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문, 순시하겠다는 것이 어찌하여 일본이 (거대한) 순시함을 보내 대응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 무력충돌 등) 또 다른 분쟁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인지? 보라는 뜻이 완전 무장한 1개 중대, 대대 병력을 이끌고 모두 담당하게 순시하는 위력파시도 아닐 진데 왜 무산시켰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각각 독립된 정부부처간의 계획에 대한 의견을 회시(回示)하면서 그 부처의 장에게 (당신의)“...행위는”이라

외교통상부장관님,(이하 “장관님”이라 하겠습니다) “행위”에 대해서는 그저 아연실색할 뿐입니다.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는 냉엄한 국제사를 사용하며 의견을 밝힐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공식석상, TV에서까지 방영된 장관님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저 아연실색할 뿐입니다.

설마 장관님께서 경찰청장은 차관급이니까 하대(下待)하는 관념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만, 경찰청장도 분명히 장관님과 같이 “정부조직 및 직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부처의 한 수장(首長)이며 인격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경찰청장이 장관님에게 “장관님의 그러한 “행위(行爲)”는 치안질서에 문제를 낳을 수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한 수 가르치듯 공식석상에서 잠정하게 발표하거나 TV로 방영된다면 이런 평소 “엘리트”라 자부하는 외교통상부 전, 현직 직원들의 자긍심에 얼마나 많은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겠습니까?

19일에는 독도를 순시한 경찰청장이 현지에서 “지구상에 다케시마는 없다”라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모두 장관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일본은 대응조치로 발세 자기들이 자랑하는 거대한 정예 순시함과 전투기가 투입, 우리와 분쟁을 낳을 수 있는, 일촉즉발의 전쟁일보 전까지 갔었어야 할 긴박한 사안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고이즈미 일본총리는 17일 “감정적인 대립을 극복해 미래지향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마치무라 일본 외상은 “한국민의 심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나. 과거를 직시하고 반성할 것은 한다” 교묘한 언어의 술수(術數)로 미화한 담화문을 발표 일본의 대응조치(?)로만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장관님께서 21일, 우리 정부의 (강력한)대응자세와 관련, “항상 조용한 외교로 가지는 않았고 이번에는 (한번) 강하게 한 것”이라 하신 말씀, 시류(時流)에 따라 하신 말씀인 것 같아 얼마나 장관님의 모습이 괴곡하게(?) 보이셨는지 모릅니다.

장관님, 이만 올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나라의 먼 장래를 내다보고 격정하는 장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우신문 기고문은 이렇게!

時論, 提言, 독자의 소리 등 경우신문에 기고하실 분은

200자 원고지 8매이내(A4용지 기준 2장이내=글자글수 14포인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